

이라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6

I. 일반개황

면적	442천 km ²	GDP	980억 달러 (2011년)
인구	32백만 명 (2011년)	1인당 GDP	2,983달러 (2011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Iraqi Dinar (ID)
대외정책	친미노선	환율(달러당)	1,170 (2011년 평균)

- 이라크는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와 3,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슬람 국가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음. 세계 제 4위의 원유(확인매장량 1,150억 배럴), 제12위의 천연가스(112조 ft³)를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미탐사 유전지역이 많아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의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여 왔으나, 빈번한 테러와 저항 활동에 따른 치안 불안과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12월에 말리키 총리가 주도하는 신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이해관계와 성향이 상이한 여러 정치집단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정치·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2011년 12월에 미군이 완전 철수한 이후 폭탄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파종파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내전 발발이 우려되는 등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석유산업이 경제의 동력

- 석유산업이 GDP의 60%, 수출의 98%, 재정수입의 90% 이상으로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은 국제 유가의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따라서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경제 재건도 원유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출 극대화 등 석유산업의 성장 없이는 불가능함.

□ 불안한 치안 상황이 경제성장 지속의 큰 걸림돌

- 2003년에 이라크전쟁 발발에 따른 산유량 감소와 체제 붕괴에 따른 사회 혼란의 여파로 경제는 무려 -33.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복구 수요 및 투자 증가로 23%의 급성장세로 전환되었음.
- 이후 정정 불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시리아, 요르단 등 주변국으로 이주하면서 내수가 감소하고 산유량도 줄어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쳤음.
- 2008년에는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원유 생산량도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9.5%로 급등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및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4.2%로 크게 둔화되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1.5	9.5	4.2	0.8	12.2
재정수지 / GDP	12.4	-1.2	-21.8	-10.6	-13.7
소비자물가상승률	30.8	6.8	-4.4	3.3	5.0

자료: IMF.

- 2010년에는 북부 송유관에 대한 폭탄 테러로 인한 원유수출 차질과 정치 불안으로 원유의 생산·수출이 저조하여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쳤음.

- 원유 수출량은 정부 전망치인 210만 b/d를 밑도는 185만 b/d를 기록함.

- 그러나 2011년에는 외국 석유회사의 신규 유전개발이 본격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 원유 생산량 증가, 국내 소비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12.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은 각각 270만 b/d, 210만 b/d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는 최근 상승세로 전환

- 2007년에는 중앙은행이 디나르화 절상과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53.2%)보다는 둔화되었으나 30.8%에 달했음.

- 2008년에는 디나르화의 가치 상승 지속, 생필품 수급 개선,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8%로 대폭 둔화되었고, 2009년에는 연료 및 식품의 가격 하락세 등으로 -4.4%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의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에도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적자 지속

- 재정수지는 2004년에 산유량 감소와 복구사업 추진으로 GDP 대비 40%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5~07년에는 유가 상승 및 산유량 증가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치안불안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 등으로 흑자를 유지하였음.

- 2008년에는 원유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보조금 지급 확대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1.2%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와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21.8%로 크게 확대되었음. 2010년에도 치안 강화, 원유, 수자원, 전력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로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원유 수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에 따른 치안 강화,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지는 전년보다 다소 확대된 1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및 전쟁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 1970년대까지 이라크는 중동에서 기반시설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였으나, 수십 년 간의 투자 부족 및 19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국제 제재, 전쟁 피해 등으로 기반시설이 급속히 악화되었음.
- 전후 복구사업 수행 및 정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국과 종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으로 기반시설 파괴가 계속되고 있어 경제회복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석유산업이 GDP의 60%, 수출의 98%,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90년 걸프전 이전까지 제조업 육성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이후 UN 경제제재로 타격을 입었고,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현재 석유산업과 농업을 제외한 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황임.
- 전후 계속되는 보복성 테러 및 저항 활동으로 인하여 각종 기반시설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제조업 등 기타 산업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세계 4위인

1,150억 배럴(2010년 기준)에 달함.

- 원유는 바스라(Basrah)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과 북부 키르쿠크(Kirkuk) 지역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중부의 바그다드 인근, 북부 모술(Mosul) 지역, 쿠르드 지방정부 관할지역에도 일부가 산재해 있음.
- 9개 초대형 유전(확인매장량 50억 배럴 이상)과 22개 대형 유전(10억 배럴 이상)이 있음. 주요 유전은 동남부의 웨스트 쿠르나 유전(216억 배럴), 루마일라 유전(170억 배럴), 마지눈 유전(125억 배럴), 주바이르 유전(40억 배럴)과 키르쿠크 유전(100억 배럴)임.
- 원유의 잠재매장량은 서부와 남부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최대 2,00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현재 전체 유전의 약 10%만 탐사·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10년 10월에 슈리스타니(Hussein al-Shahristani) 석유부 장관은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이 1,431억 배럴로 기존에 알려진 1,150억 배럴보다 약 25% 많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유전지역의 매장량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라크가 2009년에 10개 유전에 대한 입찰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2차례 실시된 유전입찰은 1972년 이라크 정부의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음.
- 산유량은 외국 석유회사들의 유전 개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점차 늘어나 2017년까지 700만 b/d, 이후에는 1,000만 b/d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 이외에도 천연가스(매장량 112조 ft^3 , 세계 12위), 인산염, 황 등 광물자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수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 막대한 규모의 이라크 재건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신도시 건설, 발전설비 확충, 철도 개선, 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NIC)는 2010년 3월에 주택, 운송, 농업, 에너지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투자규모 1,500억 달러의 중장기 인프라투자계획(2010~25년)을 발표함.

<표 2> NIC의 2010~25년 인프라투자계획

단위: 개, 억 달러

분 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농 업	48	180
에너지	12	45
보 건	31	미정
주 택	100만 호	500
통 신	6	6
관 광	151	미정
운 송	24	200

자료: NIC.

- 이와는 별도로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는 2010년 7월에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총 투자규모 1,860억 달러의 국가개발5개년계획(2010~14년)을 발표한 바 있음.
 - 부문별 투자배분비율은 석유·전력산업 등 30%, 건설·서비스산업 17%, 쿠르드 지역 개발 17%, 지방 개발 12.5%, 농업 9.5%, 운송·통신산업 9%, 교육 5%임.
- 이와 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2011년에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해외건설 공사 수주가 이어졌음.
 - 2011년 2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사업(2.2억 달러)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STX 중공업이 디젤발전 플랜트 건설사업(30억 달러)을, 한화건설이 신도시 건설사업(72.5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건설공사 사상 최대 규모)을 잇달아 수주하였음.

다. 정책성과

□ 자유시장 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 2003년 종전 후에 출범한 정부는 후세인 정권에 의한 30년 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철폐하고,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였음.
- 정부는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투자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을 개혁하고, 단일 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소득세 도입, 균형예산 편성, 국채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였음.
 - 금융·통화 부문: 신권 발행, 변동환율제 정착, 이자율 자유화, 중앙은행 독립 등의 정책 시행
 - 석유 부문: 3개 국영 석유공사 통합 진행
 - 통신 부문: 위성방송 허용,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유선 전화망 정비

□ 고용창출 노력 강화

- 정부는 2007년 시멘트, 섬유, 제약, 석유화학 등 분야의 21개 국영기업을 선정하여 국영은행인 Rasheed은행과 Rafidain은행¹⁾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총 인구의 1/3이 국가에 의해 고용된 상태임.
- 또한 2010년 7월에 수립된 국가개발5개년계획(2010~14년)은 3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재 15%에 달하는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 2007년 11월 정부는 국가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관련 조적을 정비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개정하였음.
- 치안 및 정정 불안으로 아직은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으나, 최근 석유법을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미군 철수 후 독자적인 재건·투자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1) 이라크에는 Rasheed와 Rafidain의 2개 국영은행이 있으며, 이들이 국내 총 은행예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에 10개 유전지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12개 유전지역에 대한 추가 입찰을 계획하고 있는 등 원유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2006년부터 총 수출의 98%를 차지하는 원유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2008년까지 흑자를 지속하였음.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22억 달러 규모의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70억 달러대의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21억 달러의 흑자로 다시 전환되었음.
-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폭이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288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2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141	264	-22	21	218
경 상 수 지 / GDP	15.9	30.5	-3.4	2.6	22.2
상 품 수 지	230	340	9.9	78	288
수 출	396	637	394	518	828
수 입	166	298	384	439	539
외 환 보 유 액	315	502	443	506	505
총 외 채 잔 액	1,023	826	730	526	508
총외채잔액/GDP	115.2	95.5	112.0	64.0	51.8
D S R	1.8	1.5	3.7	4.6	3.5

자료: IMF, EIU.

□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외채감소 등 외채상황 개선

-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2003년 종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0년 말 기준 506억 달러(수입액의 8.2개월 분)를 기록하였는데, IMF는 이를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4년 11월 파리클럽과 쿠웨이트 등이 이라크 채무 중 80%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는 등 국제 사회의 외채탕감과 최근 수년간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말 기준 3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0년 11월, 신정부 구성을 위한 권력분점 합의

- 2010년 11월 8일에 이라키야, 법치국가연합, 쿠르드연맹 등 주요 정당이 권력분점에 합의함에 따라 2010년 11월 11일에 의회는 국회의장, 대통령을 차례로 선출하고 이후 최다수 의석 연합체에 의해 총리가 지명됨.
- 국회의장으로는 이라키야의 누자이피(Osama Nujaiifi) 의원, 대통령은 쿠르드연맹의 탈라바니(Jalal Talabani) 현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총리에는 말리키 총리가 지명되었으며, 말리키 총리는 헌법에 따라 30일 내에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음.
-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라키야는 정당 간 연합 등을 통해 차기 총리직을 차지하려 하였으나, 말리키 총리의 연임을 지지하는 거대 시아파 블록이 형성됨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됨. 이에 따라 총리직을 법치국가 연합에 양보하는 대신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음.

□ 2010년 12월, 신정부 출범하였으나 신정부 이탈 가능성 잠재

- 연임에 성공한 말리키 총리가 2010년 12월에 제출한 새 내각 명단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마침내 신정부가 출범하였음. 새 내각에는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이 모두 참여하였음.

- 말리키 총리는 9개월의 국정 공백을 닫고 신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상이한 이해관계와 성향을 가진 정치집단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정치·사회 상황에 따라 이탈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또한, 일부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대립하면서 준독립적인 지방정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연방 체제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2011년 10월 살라후딘주(州)가 스스로 반자치정부임을 선포하였으며, 2011년 12월 디알라주(州)가 반자치정부 자격을 공식적으로 요구함.
 -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제석유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KRG는 2011년 11월 10일 ExxonMobil과 6개의 유전개발계약을 체결하였음.
 - * 2011년 11월 말 석유부는 ExxonMobil이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국내 4차 원유 및 가스 입찰(2012년 5월 말 예정)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중앙정부가 2011년 6월부터 KRG 관내 원유생산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2012년 4월에 KRG는 원유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대금 지급, 석유수입 분배, 외국 석유회사 간 계약 승인 문제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KRG 간의 갈등의 심화되고 있음.
 - * 현재 쿠르드 지역에는 약 45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KRG가 원유를 수출하려면 이라크 국영 송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

- 종전 후에도 시리아 등에서 유입된 알카에다의 테러·저항활동이 이어지다가 2007년 미군 증파와 치안안정 노력이 주효하여 치안 상황은 점차 개선되었으나 2011년 말 미군 철수 전후로 다시 악화되고 있음. 특히 바그다드의 치안상황이 극히 불안함. 이라크는 국가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며, 외국 기업인의 빈번한 납치로 정상적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음.

- 미군은 2009년 6월에 이라크 도심에서 지방으로 철수하였고, 2010년 8월 말에 병력이 65,000명에서 50,000명 수준으로 감축된 후 2011년 12월 18일에 완전 철군하였음.
- 2009년 미군의 도심 철수 이후 테러가 급증하여 2009년 8월 바그다드의 대형 폭탄테러(사상자 700여 명), 2011년 11월 바그다드 북부의 교도소 폭탄 테러(사망자 최소 19명) 등이 이어졌음.
- 미군이 완전 철수한 이후에도 2011년 12월 바그다드 연쇄폭발(사상자 90여 명), 2012년 1월 경찰서 자폭테러 및 차량폭탄테러, 2012년 2월 경찰학교 자폭테러, 3월 서부 하디타(Haditha)의 검문소 테러, 북부 탈 아파르(Tal Afar) 마을의 연쇄폭탄 테러 등 빈번한 테러발생으로 치안이 불안한 실정임.

□ 반정부 시위사태 발생

- 2011년 2월 말에 수천 명의 시민이 실업 감소, 전력공급 확대, 상수도 개선 등의 생활수준 향상과 치안 개선 및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
- 정부가 2011년 예산에서 전기 공급 확대와 서민용 주택 건설에 총 257억 달러를 배정하는 한편, 전투기 구매 예산을 삭감하고 설당, 밀 등 서민용 식량 배급을 확대하는 유화책을 실시하여 시위는 일단락되었음.
- 2012년 3월 19일에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9주년을 맞이하여 바라스 주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수준 향상 및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를 벌였음.
- 향후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반정부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며, 연립정권을 불안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치안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정파·종파 간 분쟁 격화

- 이라크에서 시아파와 수니파는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 정파를 형성하고 있음. 북부 쿠르드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독자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방제, 석유법 등의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2010년 12월 신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수니파의 불만이 표출될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음.
- 2012년 1월 남부의 항구도시 바스라 인근에 있는 시아파 성지 주바이르*에서 폭발사고(사상자 150여 명)가 발생하는 등 종파 간 내분이 격화되고 있고, 미군 철수 후 안보 공백으로 내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 주바이르는 이라크의 다수인 수니파에 에워싸인 시아파 성지로 이 날은 시아파가 추종하는 이맘 후세인의 기일이자 40일간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로 순례자들이 몰렸음.
- 2012년 2월 23일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바그다드 등 11개 도시에서 총격과 차량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여 2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는 시아파 중심의 정권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추정됨.

□ 높은 실업률

- 실업률은 2003년 전쟁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정부는 2008년 기준 공식 실업률을 15%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30~50%로 추정되어 높은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2012년 2월에 현재 실업률이 2008년보다 낮은 12%라고 발표하였는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3. 국제 관계

□ 주변국가 및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 2006년 정부 출범 이후 친미 외교노선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있으며,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의 외교관계도 개선되고 있음.
- 미군 철수로 국내에서 미국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미군 철수한 달 전인 2011년 11월 29일 미국의 부통령인 Joe Biden이 이라크를 방문하여 대 이라크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과의 친밀한 외교관계는 지속될 예정임.

- 또한 주변 아랍국과의 관계 개선 및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GCC 회원국,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과의 관계도 호전되고 있음. 요르단과는 2009년 9월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2012년 2월 21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주 이라크 대사를 임명하는 등 걸프전 이후 22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관계를 복구했음.
 - 2012년 3월 19일에 이라크는 미군의 침공 당시 이슬람주의 반군 세력에 동조하다가 수감된 사우디아라비아 죄수들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감된 이라크 형사범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2012년 3월 29일에 이라크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아랍연맹 제23차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011년 초의 중동민주화 시위 이후 변화된 아랍권 내 자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국제적 외채탕감으로 외채상환부담 대폭 감소

- 2004년 11월에 파리클럽은 이라크의 채무 약 420억 달러 중 약 80%인 336억 달러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쿠웨이트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80% 탕감안을 확정함.
 - 2004년 말 기준 1,2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라크의 총 외채 중 약 67%가 GCC 국가에 대한 채무(쿠웨이트 284억 달러, 사우디 250억 달러 등)*임.
- * GCC 국가에 대한 채무는 주로 1980~88년 이라크-이란 전쟁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에서 지원받은 것임. 이들은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 확산 및 시아파 확대를 우려하여 이라크를 지원하였음.
- 이라크는 2008년 2월에 러시아와 120억 달러 채무탕감에 합의하였고 2008년 7월에 UAE는 이라크 채무 70억 달러 탕감 계획을 발표하였음. 2010년 2월에는 중국이 85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채무 중 80%를 탕감하는데 동의하였음.

- 국제 채무 탕감에 힘입어 IMF는 이라크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종전의 10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011년 말 약 32.3%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함.

□ 2010년 2월 IMF, 대기성 차관 36억 달러 승인

- 2010년 2월에 IMF는 이라크의 경제발전과 개발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성 차관 36억 4천만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현재까지 17억 달러에 대한 지출승인이 완료되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최저 등급 지속

-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S&P, Moody's, Fitch는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인수 불가
- 영국 ECGD: 제한적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81년 4월 15일

□ 주요 협정

-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1983), 항공운수협정(1985), 문화협정(1985)

□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제6위의 원유도입선

-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라크산 원유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약 9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약 12억 달러, 수입은 원유 (99.5%) 등 약 81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 원유 수급 불안정시 이라크 원유 우선공급

- 2012년 3월 15일에 우리나라의 원유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원유공급 요청에 샤리스타니(Hussain Al-Shahristani) 부총리는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시 한국에 대해 원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힘.

□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 2012년 3월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는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 경제, 에너지·자원, 보건, 환경, 과학기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합의하였음.
- 이라크 측이 플랜트, 주택, 인프라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이라크 정부는 프로젝트 정보 제공, 안전 보장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표 4> 한·이라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785	1,201	1,215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 입	3,812	4,428	8,083	원유 등
합 계	4,597	5,629	9,298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1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9건, 2억 9,756만 달러

- 대 이라크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3억 달러로 교역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석유산업 등 광업(1억 2,042만 달러)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UN의 오랜 경제제재와 이라크전에 따른 기반시설 파괴로 경제는 크게 위축된 상태임. 종전 후에 자유시장 개방경제를 채택한 정부의 경제 재건 계획 추진과 고유가 및 산유량 증가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정파·종파 간 충돌과 치안 불안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의 기복이 심함.
- 이라크는 수출을 거의 대부분 원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세계 4위의 원유 및 1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미탐사 유전지역이 많아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 미군과 이라크군이 테러를 진압하면서 2007년 중반 이후 치안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빈번히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 재발 및 정파·종파간 갈등 표출 위험도 잠재되어 있음.
- 또한 2010년 3월 총선 이후 9개월 간의 국정 공백 끝에 연립정부 구성으로 12월에 신정부가 출범하였으나, 2011년 10월부터 일부 주들이 연방정부와 대립하면서 준독립적인 지방정부의 자격을 요구하는 등 갈등과 분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12월에 미군이 철수한 후 안보의 공백으로 인해 정파와 종파, 부족 간의 갈등이 무력 분쟁이나 소규모 민족국가 건설 운동으로 발전하여 현재 연방 체제의 해체 및 내전 발발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조사역 박유정 (☎02-3779-5727)

E-mail: yjpark@koreaexim.go.kr